

발전노동자

퇴출연봉제 꺼지
민주노조 사수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애고자 원칙복직
생존권 사수

제234호
발행인: 신 현 규
발행일: 2016.11.30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KOREA POWER PLANT INDUSTRY UNION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 통합 결정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의 통합을 위한 노사정 협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 투표가 지난 11월 23일 74.4%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014년 말부터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을 추진해 온 서울시(박원순 시장)의 양공사 통합 목적은 “① 서울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재구조화, ② 호선별 시설·장비를 표준화하고 모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적재 적소 인력과 예산 투입, ④ 중복 인원을 안전 분야에 투입해 안전 강화”이다. 서울시가 추정하고 있는 양공사 통합 효과는 연간 214억원이다. 유사·중복인력 1029명 감축과 메트로 본사 임대나 개발 등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640억원에 달해 통합 이후 직원 처우개선 비용과 정보시스템 통합, 통합 CI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426억원을 감안해도 200억원 이상의 재무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노사정 협의안에 따르면 통합 과정에 강제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퇴직 인력 중 중복 인력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4년간 1,029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의 45%는 안전 투자 재원으로, 55%는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 그리고 안전 업무직 처우를 개선하고 구내 운전 운영을 개선하고,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던 승강장 안전문에 대한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통합공사 출범시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용절감	통합비용
유사 중복인력 감축(1029명) 593억원	처우개선 비용 347억원 (절감인건비의 55%)
메트로 본사건물 임대 및 운영비 절감 37억원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69억원
양 공사 임원 인건비 절감 10억원	통합 CI·태 구축 8억원
합계 640억원 감축	통합용역(조직, 인사 등) 1억원
	사무실 재배치 등 통합부대비용 1억원
자료: 서울시	합계 426억원

박근혜의 기획재정부는 발전공기업 민영화 강행

최근의 언론보도(한국경제 11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상장 태스크포스(TF)는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을 내년에 우선 상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만간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상장하는 공기업 두 곳을 최종 확정된 후, 12월초 상장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증권사에 돌릴 것이라 한다. 올해 6월 14일 기재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주 재벌그룹사와 기획재정부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대가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미 박근혜가 재벌총수를 독대한 직후 면세점 선정, 재벌총수 사면 등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왔다. 그간 재벌기업과 전경련이 지속적으로 전력과 가스의 민간개방 확대를 요구해 왔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직전인 6월 14일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발전공기업 상장 또한 게이트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발전공기업 주식상장, 그 암울한 미래를 기다릴 순 없다

발전노조는 지난 15년간 전력산업의 민영화 반대 및 재통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에, 발전노조의 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지지를 받아 왔다. 올해 6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발전공기업 주식상장 방안에 대해서도 발전노조는 8월 11일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 **“주식 상장시, ① 주주의 이익 배당 요구 증가로 장기 재무상황 악화, ② 설비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감소로 발전공기업의 공적 역할 축소, ③ 전기요금 및 부담금 인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시장에서 민간발전회사들의 설비용량 비중은 약25%에 육박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6대 민간발전회사들의 2015년 수익 합계는 7,600억을 넘는다. 전력이 부족했던 2012년에는 무려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었다. 2014년 이후 전력부족 국면이 해소되어 수익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높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SK E&S의 설비용량은 남동발전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수익은 비슷하다.(남동발전의 2015년 당기순이익은 5,832억원이었다.) 그런데도 민간발전회사들은 여전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SK E&S	175,850	609,730	426,871	315,881	585,524	2,113,856
포스코에너지	46,100	181,869	144,832	18,397	18,752	409,950
GS파워	74,647	79,727	84,474	78,417	80,916	398,181
GS EPS	53,351	91,520	102,038	45,057	31,525	323,491
MPC울촌	33,469	32,136	29,244	54,042	34,191	183,082
MPC대산	7,467	7,701	7,960	9,251	7,511	39,890
합계	390,884	1,002,683	795,419	521,045	758,419	3,468,450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민간발전회사들의 탐욕스러운 로비와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설비과다로 인해 예비율이 증가하고 LNG가동률이 떨어지자, 민간발전회사들은 용량요금(CP) 인상에 이어 전력거래제도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산업포럼 전력정책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민간발전회사의 대변인으로 나선 몇몇 교수들이 **“낮은 발전단가 순으로 구매하는 CBP(변동비 반영 전력시장) 체제로 운영되는 현행 전력시장은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석탄이 유리한 구조이다. 특히, 높은 전력예비율 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인 SMP가 요즘처럼 낮게 형성되면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기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발전소 가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동을 하더라도 손실이 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기소비자 보호 등을 강조하지만, 발전사업자들이 죽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시장구조를 제한적 가격입찰 등 경쟁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대목은 민간발전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보여준다.

민간발전의 몰염치한 요구에 정부가 즉각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투데이는 11월 28일자 <‘적자없는 발전공기업’ 불문을 깨진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7일 전력당국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정산조정계수 산정방식이 전력시장의 효율 제고나 안정성, 공정한 경쟁 등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본격적인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라면 민간발전의 설비비중과 수익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발전공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소요되는 부담도 대부분 발전공기업에게 떠넘길 것이다. 수익만을 추구하는 민간발전회사에게 공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이 상장되어 축소될 수익마저 배당으로 유출된다면, 해당 발전공기업은 소멸될 수도 있다.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과 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저지하지 못한다면, 발전노동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국민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미 드러난 노골적인 발전민영화 정책에 대해 당사자이자 대표노동조합인 동서발전노조와 남동발전노조는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고, 전체 발전노동들의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